

음식물쓰레기 용기 줄이고

광산구·서구청 등 수거 용기 15 l로 교체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근골격계 질환 예방

광주시 일부 자치구가 환경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거용기 크기를 축소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21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부피를 기존 20 l에서 15 l로 줄여 활용 중이다”고 밝혔다.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각 동상가 일대에 설치된 20 l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4787개 중 4637개를 15 l로 교체해 활용 중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나머지 150여 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역시 이달 말까지 15 l로 교체할 방침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100 l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75 l로 교체한 바 있다.

환경 미화원의 부상 예방과 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서구 역시 지난 3월 1일부터 주민들이 사용 중인 20 l 부피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15 l로 무상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사용 하던 20 l 수거용기는 음식물이 담기게 되면 실제 무게가 약 35-40kg에 달해, 환경직 근로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았다.

환경직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용기를 가슴 위쪽까지 들어 올리면서 목·어깨·허리·팔다리 신경·근육에 질환이 나타났고, 안전 사고 위험성도 줄곧 제기돼 왔다.

서구는 이에 수거 용기 부피를 축소하면서 최대 10kg의 무게감소와 함께 환경직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용량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20 l 용기를 사용 중인 업소는 서



광주 서구청이 배포한 15 l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청 청소행정과로 전화 접수해 15 l 용기를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잡고

서구, 골목길 로고라이트 설치 쓰레기 투기·범죄 예방 효과 동구, 원룸 520곳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배출량 감소

쓰레기 무단 투기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된다.

광주 서구는 21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원룸촌 등 쓰레기 상습투기 발생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로고라이트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렌즈에 LED 불빛을 투사시켜 바닥 또는 벽면에 이미지를 비추는 장치로, 야간에 무단투기 금지지역임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이번에 설치된 로고라이트는 원룸,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에 중심으로 설치됐다.

로고라이트가 설치된 골목길은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등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비추는 범죄예방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게 서구청 관계자의 설명.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아기가 배워도 되나요?’ 등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문구를 제작, 운영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로고라이트 설치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주민의식 개선 효과가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 설치 장소에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원룸주택 밀집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추진한다.

광주시 동구는 21일 “민·관 협력 사업으로 원룸 520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동구가 전수 조사한 결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원룸은 100여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관리까지 함께 이뤄지는 원룸은 절반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



광주 서구청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설치한 로고라이트.

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동구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점검과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지구의 날’ 온라인 캠페인

25일까지 ‘지구를 위한 10일의 행동’ 주제 SNS프로필 사진바꾸기 등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포스터)’을 맞아 제50주년 지구의 날 기념 SNS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한다.

지구의 날 행사는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규모 해상 기름 유출사고 계기로 환경파괴에 대한 촉구 집회로 시작돼 1990년 지구의 날 20주년이 되면서 세계 각국 민간운동단체가 참여해 범세계적인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한 행사다.

올해는 ‘지구의 날’이 제정된 50주년이

된 해로 시민사회단체, 시민,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다양한 주제의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비상상황 임을 감안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기념행사는 ‘지구를 위한 10일의 행동’을 주제로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SNS 릴레이 캠페인 등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페이스북과 인스

타그램에 지구를 위한 1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1명을 지정 게시해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에 따라 응모하면 된다.

캠페인 참가방법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의 ‘광주 지구의 날’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을 추천해 광주시회적경제기업 카페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990년대부터 중심사 입구에서 자전거 대행진, 무등산보호 관련 캠페



인을 진행해 왔고, 2000년부터는 금남로 일원에서 공식적인 지구의 날 기념식과 이벤트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알리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 살균·소독제 불량 제품 주의!”

환경부, 안전·표시 기준 위반 5개 제품 제조·판매 금지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회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세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라캐처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

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약화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조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원순환 실천 함께 할 미래세대 대표 뽑는다

환경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원순환 실천 운동을 함께 할 미래세대(어린이·청소년) 대표를 뽑기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미래세대 대표 선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순환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진 9세부터 16세(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 기준)까지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 공모전은 1차·2차에 걸쳐 미래세대 대표 1명을 최종 선발한다. 먼저 1차 심사 공모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들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영상 심사를 통해 총 5명의 대표 후보자를 선정한다.

영상에는 자원순환 실천 경험과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본인 생각, 자원순환 실천 계획 등 실천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폐의약품, 약국·보건소 외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다

앞으로 폐의약품을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만 버릴 수

있는데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약국도 많아 국민들이 폐의약품 폐기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수거지 확대와 함께 약사의 복약 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